

선거를 앞두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신은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1. 청활넷 및 질의서 소개

1) 청활넷 소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모두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와중에 후보들의 공약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도시를 뒤엎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활넷은 보다 성평등하고, 안전하고, 혐오와 차별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서울을 이야기하는 보궐선거를 만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청활넷은 현재 10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과 간담회를 가져 그들의 의무를 요구하고,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검토하고, 청년 공론장을 꾸려 의견을 나누고, 기자회견을 가져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 토론 주제 및 질의서 소개

청활넷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으로 꾸려진 것이라, 제가 다루는 범위가 서울시에 머물것임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토론자리에서는 청활넷이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들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살펴보고 후보들의 안일한 기후감수성을 비판하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토로하고자 합니다. 질의서는 청활넷의 4대원칙에 따라 4개 분야(불평등, 성평등, 기후위기, 청년/시민참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활넷 내부에서도 질의서 작성팀이 따로 꾸려져 질문을 다듬었고, 오늘 살펴볼 기후 분야의 경우 많은 기후활동가들의 인풋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3) 질의서 (4가지 질문)

질의서 [기후위기]에 해당하는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기후위기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불평등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기후정의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서울시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은 건물 부문입니다. 2018년 서울 내 이상기후 피해를 받을 노후주택 비율이 72.58%로 매우 높았습니다. 대다수의 집이 온전히 서울시민을 보호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폭염, 한파, 폭우, 태풍 등 더욱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이상기후는 무더위 쉼터나 냉난방 기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후위기대응과 적응 측면에서 앞으로의 주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후보님의 의견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송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19%, 미세먼지의 21%를 배출합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내연기관과 무동력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등) 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각종 사회적 비용(혼잡비용과 환경비용 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공교통,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후보님의 수송 부문 탈내연기관 실현, 도로공간 재편, 공공교통 강화를 통한 걷고 싶고 숨 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서울시는 탄소중립 계획은 마련했지만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기후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모니터링 체계) 구체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부시장과 기후예산제 도입 (ex. 오슬로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방식과 목표량을 비교해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 확보와 책임기관 선정) 혹은 이에 버금가는 기후위기대응 이행체계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 드립니다.

2. 질의서 답변 현황

일단 질의서는 총 6명의 후보(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송명숙, 오태양, 신지예)에게 송부되었고,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5명 후보들에게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전문 : bit.ly/s21vote

3. 여당과 제1야당 후보 공약 (기후파괴공약)

1) 박영선 후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와 관련된 공약들도 발표했지만, 4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여지듯 기후위기 대응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정의'에 대한 의견을 내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도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후보의 공약들을 쭉 기입한 정도였습니다. 건물의 경우, 감축 목표는 있지만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건설하는 데 배출될 온실가스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송에서는 도보와 자전거가 아닌 차량 중심의 공약뿐이었습니다. 전기/수소차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자가용 수요 관리와 공공교통에 대한 의견을 부재했습니다. (21분 구독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면 오히려 이는 교통혼잡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도 전혀 상관없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녹색길, 녹지, 숲을 재차 언급할 뿐 이행체계에 대한 안도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녹지를 강조하며 친환경을 어필하지만, 사실상 재개발 공사에 우선순위를 두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걸고 있는만큼, 현 공약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거란 걱정이 많습니다.

2)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았는데, 이 후보는 질의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반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완전히 배치되는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5대 공약에 기후공약이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 태양광 설치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존 서울시 정책 기조에 있어서도 안들을 보류/폐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불평등에 있어서도 많은 정책들에 수정보류 혹은 보류폐기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정넷이 추진했던 시민참여예산(5%)은 보류폐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기간 당시 C40에 가입(2006)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나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진 현재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언급한 공약이 단 하나도 없을만큼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 군소정당&무소속 후보들의 공약

이들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거나 권리 기반 접근으로 사람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갖고 있던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 한계를 해결할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다른 해외 도시들에서 시도하고 있던 정책이나 시민들이 요구해오던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었지만, 이름만 가져왔을 뿐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할 기반을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할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건물 부문에서 신지혜 후보와 송명숙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이 부족했고, 오태양 후보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만을 담고 있어 한계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태양 후보는 수송 부문에서도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녹색교통카드제)이며, 다른 후보들은 자가용 수요관리까지 공약으로 말했지만 공공교통, 보행자, 자전거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꼭지에서 이어 말하겠습니다.

6. 논의되어야 할 점

- 1)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책의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수소차를 몇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이게 얼만큼의 자가용 수요를 감축할 것인지,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령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그 대상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후보들도 막연한 목표치와 이름만 내세울 뿐 이러한 점검 혹은 포캐스트(forecast)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는 주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자신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 새로 공급될 주택에 주거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의 청년주택만 해도 월 약 50만원 이상으로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공약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잘못 설정되면, 도시 전체 계획의 미래상을 그리기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곧 기후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모든 정책안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정확한 타겟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 2) 목표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올 초 서울시가 C40에 제출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상으로 서울시는 넷제로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고, ZEB 3단계(에너지자립률 60~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신축건물 넷제로 및 유리벽 규제를 발표했고, LA는 작년에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안에서 2025년까지 신축건물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건물, 수송, 폐기물 모든 부문에서 2050년에도 배출될 (목표상) 약 940만톤(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를 녹지 부문에서 모두 상쇄할 거라 계획했는데, 이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2045년으로 탄소중립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다시금 녹지의 상쇄량을 근거 없이 높게 잡는다면 탄소중립은 2050년이 아니라 그 후에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 3) 목표 아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고, 이를 점검할 모니터링 체계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 4) 무엇보다 서울은 도시 전체가 에너지자립률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립률까지 다른 지역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지역균형’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대 소비지역인 서울시에서도 기후정의론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폐기물 처리 이전 생산단계에서의 규제 등에 나서야 합니다.
- 5) 감축보다 논의 진전이 부진한 곳이 ‘적응’입니다. 권리기반의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에, 수송부문만 하더라도 여전히 전기/수소차의 ‘자가용’을 강조하게 되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뒤로 밀립니다. 올 초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큰 골자는 작년 7월 서울판 그린뉴딜과 다르지 않았습다. 이는 곧 그린뉴딜에서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뜻이며, 실제로 주거권, 이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 실현의 내용은 부재했습니다. LA의 그린뉴딜 계획안(2019)은 환경정의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물과 주거&개발도 분리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사용 자체의 감축 목표를 명시하였고, 주거&개발 부문에서는 거리 홈리스, 세입자 안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7. 선거를 앞두고 좌절하는 청년들

[그림1]은 청활넷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하면서, 청년들이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은 것입니다. 후보들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모습에 청년은 없다, 가결론입니다. 저의 지인은 최근 지하방으로 이사를 하며 여름의 장마를 걱정했습니다. 새로 공급하겠다는 주택에 청년의 자리가 있을까요? 개발공약이 난무하는 서울시장 선거, 안타깝게도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좌절감을 안고 연대해야겠습니다.



[그림 1] 청활넷,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 설문조사에서